2026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지역별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지역 균형 발전의 뒷걸음

이름	정*기
전공	기업융합법학과
학번	2026****

지역별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지역 균형 발전의 뒷걸음

기업융합법학과 2026**** 정*기

목차

1. 서론
2. 현행 최저임금법과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개정안
  2-1. 현행 최저임금법의 개념과 결정구조
  2-2.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개정안 주요 내용
3.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의 주요 난점
  3-1. 지역의 낙인효과와 기업 이탈 우려
  3-2. 지역소득 역외유출 가속화
  3-3.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 정책화
4. 결론
참고문헌

주제문: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라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기에 도입을 반대한다.

1. 서론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2022년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이 중 비수도권 폐교율은 88.6%로 확인되었다. 이에 교육위원회 강의원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해 특별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1)]”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책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역경제의 정주 여건, 교육 인프라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만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 보고서는 지역별로 차등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인위적인 임금 상향이 불러오는 사회적 인식, 경제적 한계, 정치적 위험을 중심으로 제도의 목적인 인구 유입과 일자리 확대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김도하 기자(2022. 10. 13.), 「강득구 의원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폐교율 비수도권이 90% 육박...'마을 소멸' 우려"」, ≪한국농어촌방송≫,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8090606245(2026. 6. 15.).

2. 현행 최저임금법과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개정안

2-1. 현행 최저임금법의 개념과 결정구조

최저임금법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을 법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2] 정부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1999년에 공포·시행[3]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나,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심의와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최종 고시[4]하고 있다.

2-2.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개정안 주요 내용

2021년 기준 전국 주민등록 세대는 2,347만 2,895세대로, 약 49.2%에 해당하는 1,156만 6,649세대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5]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선정[6]하였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인구 감소가 심화된 상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된 발전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7]은 지역별 인력 수급 구조 차이가 평균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저임금 낙인효과,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을 개정 사유로 지적하였다.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 노동력을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를 100%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기준 최저임금을 상향 적용해 지역 인구 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며,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내 인구 유인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향에 소요한 비용 차액을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하여 제도의 부작용 방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3.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의 주요 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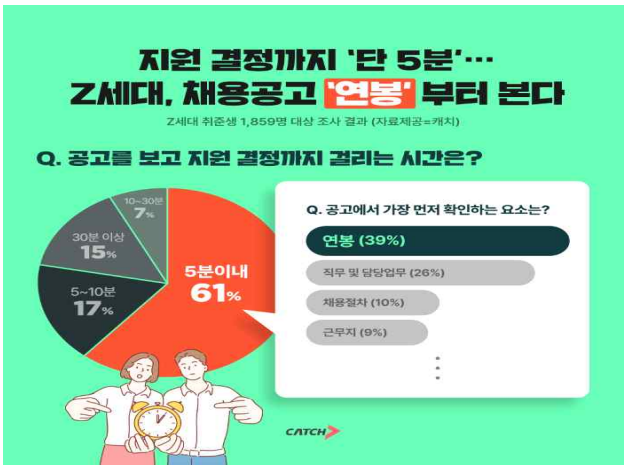
3-1. 지역의 낙인효과와 기업 이탈 우려

구인구직 플랫폼 캐치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Z세대(1997~2012년) 취준생 1,8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

2) 법제저 편(2020. 5. 25.),「최저임금법」, 제1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url.kr/lnad8z(2026. 5. 25.).
3) 최저임금위원회(n.d.),「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https://url.kr/axaw3j(2026. 5. 27.).
4) 법제저 편(2020. 5. 25.),「최저임금법」, 제8조,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url.kr/lnad8z(2026. 5. 27.).
5) 행정안전부(2026. 6. 1.),「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url.kr/owu9l5(2026. 6. 2.).
6) 행정안전부(n.d.),「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https://url.kr/1udkj7(2026. 6. 2.).
7) 정우택의원 등 10명(2023. 6. 7.),「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url.kr/xcehvz(2026. 5. 25.).

결과, 채용공고에서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소로는 연봉이 1위에 해당(그림1)[8]하였다. 현재 청년층에서 직업을 구하는 데 임금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월 200~300만 원 안팎의 근로자를 비하하는 '200충', '300충'이라는 단어가 유행(그림2)[9]하며, 임금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비교되는 사회적 평판의 성격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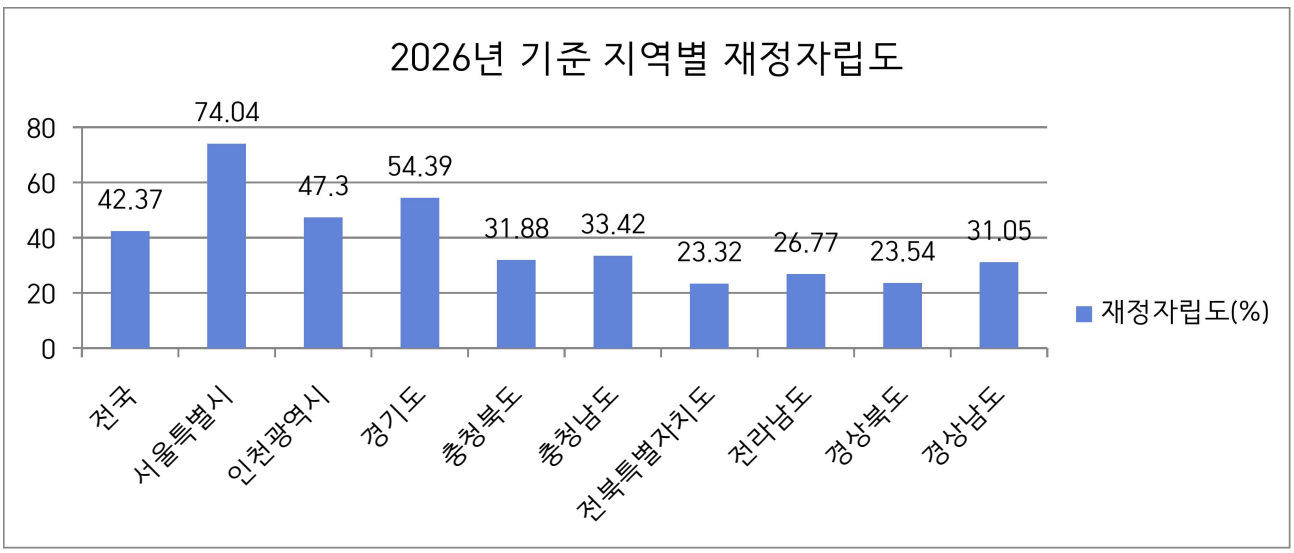


<그림1. Z세대 취준생의 채용공고 확인요소 및 지원결정시간>



<그림4. 직장인 커뮤니티 내 급여 수준 관련 게시글 사례 >

따라서 청년층이 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기존 대비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청년층을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89개 시·군·구[10] 중 79곳이 강원도·전라도·경상도·충청도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지역들의 2026년 재정자립도[11]는 다음과 같다.



<차트1. 2026년 기준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8) 캐치(2025. 3. 21.), 「지원 결정까지 '단 5분'… Z세대, 채용공고 '연봉'부터 본다」, 캐치, https://url.kr/85f7fk(2026. 6. 4.).
9) Blind(2025. 7. 25.), 「10년차 300충ㅜ」, https://url.kr/6mjkjq(2026. 6. 4.).
10) 행정안전부(n.d.), 「인구감소지역 지정」, 위의 글.
11) 행정안전부(2026. 5. 12.), 「재정자립도」, 국가데이터처, https://url.kr/ymcpje(2026. 6. 5.).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12]”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의 다수(79곳)가 해당하는 도 단위 지역 재정자립도는 전국에 대비 약 19% 밑도는 지역도 있는 등 서울 및 수도권과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상태로 확인된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수입원을 마련한 것이 아닌, 예산을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수입원이 부족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최저임금을 기준보다 상향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상향된 최저임금의 차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13]을 시행한다면 임금은 사회적 평판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비교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인식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지역의 사회적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설 투자를 통해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 투자를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낙인효과로 기업 투자 감소와 고용 위축을 초래하여 지역 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3-2. 지역소득 역외유출 가속화

현재 대한민국은 KTX,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 안에 진입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통망을 활성화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여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제고하고자 지역 내 기차를 정차 및 신규 고속도로의 경로 수정을 요청한다.

특히 2021년 동해선 복선전철 무궁화호 개통에 있어 남창역이 배제되었다는 사유로 지역사회단체장들이 주민들과 함께 한국철도공사 항의 방문 및 사옥 앞 집회, 개통식 행사 저지, 선로점거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적이 있을 정도[14]이다.

그러나 정말 기대와 같이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는지를 보면, 정반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교통의 발달이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가 주변 중소 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현상[15]”인 빨대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불균형 발전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내에서의 생산액 또는 지역의 부가 지역 외로 유출된다는 것"[16]이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아래와 같이 지역총소득(총본원소득)과 지역내총생산(GRDP)과의 차이인 시도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을 보면 알 수 있다.[17]

(단위: 백만 원)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전국		36,904,500	서울특별시	73,432,749
광역시	부산광역시	4,451,192	광주광역시	3,988,662
	대구광역시	11,423,770	대전광역시	6,081,654

12) 지표누리 e-나라지표(2026. 6. 4.),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국가데이터처, https://url.kr/fh587n(2026. 6. 5.).
13) 정우택의원 등 10명(2023), 위의 글.
14) 박동욱 기자(2021. 12. 27.), 「무궁화호 남창역 무정차 강행하면 선로점거…울주군수의 으름장」, ≪KPI뉴스≫,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8090606245(2026. 6. 6.).
15) 매일경제(n.d.), 「매일경제용어사전, 빨대효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url.kr/blvaif(2026. 6. 16.).
16) 정재준(2018),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 유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 21권 4호, 2쪽.
17) 국가데이터처(2026), 『2024년 지역소득통계』, 국가데이터처, 84쪽.

	인천광역시	6,794,831	울산광역시	-20,344,232
인구소멸위험지역	충청남도	-33,392,167	충청북도	-14,690,874
	전북특별자치도	343,054	전라남도	-12,070,757
	경상북도	-20,573,050	경상남도	-11,120,632
	강원특별자치도	-3,991,952	제주도	-349,603

<표1 2024년 시도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18]>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이 양수인 경우 소득이 지역 내로 순유입된 것을 의미하는데,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는 소득이 유입된 것이 확인된다. 반면 음수(-)인 경우 지역 내 소득이 순유출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충청도, 전라남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에서는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서 일궈낸 소득은 해당 지역 내 소비되는 것이 아닌 수도권 또는 인접한 광역시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위 통계자료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가 혁신도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19]”인 혁신도시를 조성하였는데, 혁신도시의 상권은 점심·퇴근 시간대에는 붐비나, 저녁·주말은 유동 인구가 급감한다. 많은 직원의 가족이 수도권에 남고 직원만 지방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금요일 밤마다 수도권 또는 본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20]

위와 같은 구조 속에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표면적으로 근무직원의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인구 및 특정 시간대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로 지역 내 소득이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의 발달로 단축되는 이동시간과 다른 지역보다 높은 최저임금 적용, 혁신도시의 사례는 결국 소비는 주거지와 인프라가 더 개선된 수도권과 인접 광역시로 집중되어 소비 유출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 기반과 지역경제 침체가 현재보다 심화되는 경제적 한계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3.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 정책화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기본 원칙[21]이다. 2026년 6월 3일에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및 경기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출마자들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22]하고 대중교통 무상화를 추진[23]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8) 국가데이터처(2025. 12. 23.),「시도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국가데이터처, https://url.kr/z4vcp9(2026. 6. 6.).
19)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n.d.),「혁신도시란?」, 국토교통부, https://url.kr/3yeten(2026. 6. 6.).
20) 조용훈 기자·황보준엽 기자(2026. 5. 18.),「153개 공공기관 옮긴 혁신도시…인구 늘어도 삶은 수도권에」, ≪뉴스1코리아≫,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168125(2026. 6. 6.).
21) 법제처 편(2026. 6. 2.),「지방자치법」, 제12조, 제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url.kr/lnad8z(2026. 6. 7.).
22) 김명주 기자(2026. 5. 15.).「정원오 "지역사랑상품권 6488만→2.5조 규모 발행"」, ≪THE FACT≫, https://news.tf.co.kr/read/life/2323138.htm(2026. 6. 6.).
23) 김양혁 기자·김수정 기자(2026. 5. 29.),「[6·3 지방선거] 쏟아지는 '무상OO' 공약… 아침밥부터 대중교통에 집까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6/05/29/NSXZXMWTBBGCPEE7WW3MBPAY/(2026. 6. 9.).

실현 가능한 공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이 아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차액을 중앙정부가 지원[24]하는 방식은 결국 근로자(지역주민)들은 더 높은 월급을 받고 사업주는 부담을 덜게 되어 지역 내 보조금과 유사한 효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출마자가 가장 먼저 채택하려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역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근 지역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게 된다면, 포퓰리즘 공약으로 변질되는 정치적 위험과 지역 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은 지역 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기금은 무한하지 않기에 만약 정부 지원이 중단될 시 상향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사업장에서 대구 편의점 사례와 같이 지역 내 경제가 어려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거나 지역 사회가 좁아 사업주가 서로 지인일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공유[25]해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결론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이지만,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방식은 정책 효과 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먼저 실제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시, 해당 지역이 독자적으로는 자립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거나, 오히려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KTX, 도로망 확충 등 교통망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상황에서 상향된 최저임금이 지역 내 소비되는 것이 아닌 혁신도시의 사례처럼 지방에서 늘어난 소득이 정주 여건과 인프라가 더 좋은 수도권이나 인접 광역시로 소득 유출 현상인 빨대효과가 더욱 증가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차액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 위험이 있다.

이는 지역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향후 정부 재정이 고갈되었을 때 임금체불 등 고용 시장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임금 보전 방식의 임시방편을 넘어, 지방의 교육·의료·주거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종합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6. 5. 13.),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url.kr/yfwdcg(2026. 5. 25.).
국가데이터처(2025. 12. 23.), 「시도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국가데이터처, https://url.kr/z4vcp9(2026. 6. 6.).
국가데이터처(2026),『2024년 지역소득통계』, 국가데이터처, 84쪽.

24) 정우택의원 등 10명(2023), 위의 글.
25) 크랩 KLAB(2024. 12. 11.), <대구 편의점 시급 6,580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한테 물어봄 | 크랩>,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RG37shz6yzU(2026. 6. 10.).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n.d.),「혁신도시란?」, 국토교통부, https://url.kr/3yeten(2026. 6. 6.).
김도하 기자(2022. 10. 13.),「강득구 의원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폐교율 비수도권이 90% 육박...'마을 소멸' 우려"」, ≪한국농어촌방송≫,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8090606245(2026. 6. 15.).
김명주 기자(2026. 5. 15.).「정원오 "지역사랑상품권 6488만→2.5조 규모 발행"」, ≪THE FACT≫, https://news.tf.co.kr/read/life/2323138.htm(2026. 6. 6.).
김양혁 기자·김수정 기자(2026. 5. 29.),「[6·3 지방선거] 쏟아지는 '무상OO' 공약… 아침밥부터 대중교통에 집까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6/05/29/NSX2IXMWTBB6BCPEE7VWI3M5PA/(2026. 6. 9.).
매일경제(n.d.),「매일경제용어사전, 빨대효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url.kr/blvaif(2026. 6. 16.).
법제저 편(2020. 5. 25.),「최저임금법」, 제1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url.kr/lnad8z(2026. 5. 25.).
법제저 편(2020. 5. 25.),「최저임금법」, 제8조,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url.kr/lnad8z(2026. 5. 27.).
법제저 편(2026. 6. 2.),「지방자치법」, 제12조, 제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url.kr/lnad8z(2026. 6. 7.).
박동욱 기자(2021. 12. 27.),「무궁화호 남창역 무정차 강행하면 선로점거…울주군수의 으름장」, ≪KPI뉴스≫,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8090606245(2026. 6. 6.).
정우택의원 등 10명(2023. 6. 7.),「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url.kr/xcehvz(2026. 5. 25.).
정재준(2018),「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 유출 분석」,『한국경제지리학회』21권 4호, 2쪽.
조용훈 기자·황보준엽 기자(2026. 5. 18.),「153개 공공기관 옮긴 혁신도시…인구 늘어도 삶은 수도권에」, ≪뉴스1코리아≫,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168125(2026. 6. 6.).
지표누리 e-나라지표(2026. 6. 4.),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국가데이터처, https://url.kr/fh587n(2026. 6. 5.).
최저임금위원회(n.d.),「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https://url.kr/axaw3j(2026. 5. 27.).
캐치(2025. 3. 21.), 「지원 결정까지 '단 5분'… Z세대, 채용공고 '연봉'부터 본다」, 캐치, https://url.kr/85f7fk(2026. 6. 4.).
크랩 KLAB(2024. 12. 11.), <대구 편의점 시급 6,580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한테 물어봄 | 크랩>,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RG37shz6yzU(2026. 6. 10.).
행정안전부(n.d.),「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https://url.kr/1udkj7(2026. 6. 2.).
행정안전부(2026. 5. 12.),「재정자립도」, 국가데이터처, https://url.kr/ymcpje(2026. 6. 5.).
행정안전부(2026. 6. 1.),「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url.kr/owu9l5(2026. 6. 2.).
Blind(2025. 7. 25.),「10년차 300충ㅜ」, https://url.kr/6mjkjq(2026. 6. 4.).
KBS News(2023. 1. 10.), <연봉 3억 6천에도 안 와요…내과 의사 없는 산청>, 유튜브, https://url.kr/p1muhp(2026. 5. 25.).